

과학기술발전과 연구소의 역할



李 光 榮

〈한국일보 편집위원〉

요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문제는 최근 과학기술처와 상공부간의 관할권문제와 맞물려 더욱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요즘 정부안에서 일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문제에 대한 논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문제가 논의되고 정리되려면 먼저 국가과학기술발전정책 차원에서 국공립연구소, 대학, 연구소, 기업연구소의 역할분담이 함께 논의돼야 하며, 이들을 어떻게 유기적인 체제로 연결할 것인지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 소수 집단의 의견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수렴되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오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문제 논의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시작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문제가 연구와 과학기술 행정을 제대로 다뤄 보지 못한 일부 집단의 의견과 편이에 따라 제기돼, 힘을 바탕으로 일

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연구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연구소의 특성은 말할것 없고 나라마다의 독특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정부출연 연구소가 출현한 것은 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효시를 이룬다. 정부출연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70년대로 접어들면서다.

당시 새로 출범하는 연구소와 국공립 연구소를 특수법인체인 정부출연 연구소로 만든다는 까닭이 있었다. 정부 산하기관이 될 때 정부조직과 회계법상의 문제로 해서 연구의 자율성은 물론 대우등의 문제로 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출범한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초기 여러 시행착오를 하며 연구소 운영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그런대로 우리의 과학기술기반 구축에 큰 공헌을 세웠다.

그러나 '80년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부출

연 연구기관의 역할이 재정립되면서 통폐합이란 격변기를 거쳤다.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의 명분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이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 집단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일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집단의 의사에 따라 단행 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과학원(KAIS)의 통폐합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의 한국산업연구원으로의 흡수이다. 이질적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한국과학원의 인위적인 통폐합으로 탄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끝내 불협화음만 날다가 '89년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한국산업연구원에 병합된 후 지금까지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당시 많은 경험과 식견을 쌓은 우수 연구관리자들이 자리를 떠나만 했다.

'80년 연구기관의 무리한 통폐합으로 연구분위기를 깨고 한국과학기술발전을 크게 후퇴시켰으며, 이로해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지만 이에대한 책임은 지금껏 아무도 진사람이 없다.

오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논쟁과 관할권 교통정리 문제는 '80년도 상황과 물론 다르다. 그러나 일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비슷한 결과를 빚을 것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 것이다.

인건비의 상승, 원화절상, 시장개방등 급격한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의 연구개발체제를 적절히 바뀌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어떻게 바뀌야 할 것인가에 있다. 연구개발체제 특히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주어진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 체제를 갖추어 일을 해오던 연구소가 역할을 하루 아침에 바뀌 새로운 체제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생산기술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산업기술개발에 우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역할을 산업기술 나아

가서 생산기술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소를 산업과 생산기술개발 및 지원쪽으로 방향을 잡자기 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일지도 의심스럽다.

그중에서도 제품생산과 직결되는 산업과 생산기술개발은 이윤과 마케팅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써 해야할 역할에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제품의 취약점에 하나하나 파고들어 정부출연 연구소가 돕겠다면 새로운 철학과 역할정립에 맞는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본다. 현재 과학기술처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소들로는 주어진 국가주도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제대로 담당하기에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연구소는 더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엔 84개의 국공립연구소, 9백12개의 기업연구소, 3백 47개의 대학연구소(국공립대 1백37개, 사립대 2백10개), 23개(부설 8개포함)의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 연구소에 53개의 연구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수적인면에서 단연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앞서있다. 특히 기업연구소는 최근들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제품과 직결된 산업과 생산기술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출연 연구소 차원이 아니라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국공립연구소를 총망라한 국가차원의 연구소 역할문제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일은 또한 연구소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의 확고한 과학기술주도의 경제사회발전정책을 확립하는 일과 직결되고 이같은 일이 보다 선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말로만 '96년까지 연구개발비를 GNP의 4%로 끌어 올리겠다 하지말고 이중 어느정도를 정부가 담당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과학기술정책도 국가차원에서 통일되게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체제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